

● 제318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5. 2.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박환희 의원 등 60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3. 3. 27.
- 다. 회부일 : 2023. 4. 26.
- 라. 의안번호 : 57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한일양국은 수교가 맺어진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것임.
-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는 지난 1988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음.
-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때 서울과 도쿄의 인적교류 등 협력 역시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

-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났음. 양국 정부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지난 1998년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이제 미래로 함께 가야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한국주도적 해법을 거듭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적극 지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해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이 송 처 : 대통령실, 정부부처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결의안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회의 지지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결의안의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¹⁾한 바 있음.
-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²⁾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해당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화이트리스트) 배제(2019.7.),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2020)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2018.10.30.),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2건에서 피고인 일본기업(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함(2018.11.29.).

2) 한일청구권협정 :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1965년)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임.

- 그러나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 위협과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강제동원 현안의 미결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가 높아졌음.
- 우리 외교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개최하고,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2023.1.12.) 한 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음(2023.3.6.)(붙임 1).
 -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³⁾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 또한,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 판결금 등을 지급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와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⁴⁾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밝힘.
- 일본 정부 또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다고 밝힘(2023.4.28.).
- 이와 같은 상황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유엔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한일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2014.6.2.)된 공익법인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희생자·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추념 및 문화,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함.

4)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대신이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것으로 평가됨(1998.10.8.).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음.

- 그러나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반성과 사죄 부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대, 정부 입장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치 부재 등으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붙임 2).
- 결의안은 최근 계속되는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하고 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정부 입장에 대해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정부의 입장 철회와 일본의 사죄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지하면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결의안”은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서울특별시의회’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시의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기본방향은 정부의 외교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판단이 요구됨.
 -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2023.3.30.)과 본 결의안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서명부가 제출되었음.

붙임1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3.6.(월) 11:30, 박진 장관(외교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 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 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붙임2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

 연합뉴스 2023.3.10.

강제징용 해법에 "日 사과·배상 없어 반대" 59%...찬성은 35%
64%는 "한일관계, 日 태도 변화 없다면 개선 서두를 필요 없다"



강제징용 해법에 "日 사과·배상 없어 반대" 59%...찬성은 35%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5%였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찬성 응답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강한 편"이라며 "보수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찬성이 50% 안팎이었고, 반대도 약 40%로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에게서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여론조사 결과



3월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 응답률 9.5%, 무선(95%)·유선(5%) 전화면접 방식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방안 찬반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한일 관계,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연말뉴스

자료: 한국갤럽

이재윤 기자 20230310

YONHAPNEWS

[그래픽]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여론조사 결과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이를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견은 27%,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64%였다.

향후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31%,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64%로 조사됐다.

● 일본 관련 인식 요약: 2023년 3월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차 변제 방안,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35	59	정부 방안,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 대상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27	64	미래세대 대상 기부,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일 관계,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31	64	한일 관계, 일본의 태도 변화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
현재 일본 정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	85	현재 일본 정부, 과거사 반성하지 않는다

- 2023년 3월 8~9일 전국 유권자 1,002명 전화조사(CATI).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3호 www.gallup.co.kr

● 일본 관련 인식 응답자 특성별 요약: 성별, 연령별, 생활수준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차 변제 방안 (2023. 3)		일본 가해 기업의 미래세대 대상 기부 (2023. 3)		한일 관계 방향				일본 정부, 과거사 '반성하고 있다'	
	찬성	반대	배상이다	아니다	'가급적 빨리 개선'		'일본태도변화우선'		2014. 3	2023. 3
					2022. 9	2023. 3	2022. 9	2023. 3		
전체	35%	59%	27%	64%	26%	31%	64%	64%	2%	8%
성별										
남성	39%	55%	30%	63%	26%	35%	66%	61%	3%	10%
여성	30%	63%	24%	66%	25%	27%	63%	67%	2%	6%
연령별										
18~29세	30%	59%	17%	74%	22%	22%	65%	74%	4%	6%
30대	21%	75%	20%	78%	15%	18%	76%	79%	3%	3%
40대	20%	78%	17%	79%	13%	17%	83%	80%	1%	3%
50대	38%	59%	27%	64%	32%	32%	63%	66%	2%	8%
60대	53%	41%	44%	47%	35%	51%	58%	44%	1%	13%
70대 이상	49%	40%	39%	40%	39%	50%	33%	37%		18%
성향별										
보수	54%	41%	39%	54%	45%	48%	49%	47%	1%	15%
중도	29%	67%	23%	68%	22%	25%	71%	71%	3%	6%
진보	17%	79%	12%	85%	14%	16%	80%	84%	1%	3%
성향 유보	33%	45%	33%	41%	18%	32%	49%	53%	4%	6%

- 2022년 8월 9~11일 일본에 호감 21%:비호감 70%, 일본 사람에게 호감 46%:비호감 38%

/ 2022년 10월 11~13일 북한 위협 대응 목적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필요' 49%, '불필요' 44%

- 2014년 '60대'는 '60대 이상'을 의미하며, 2023년 현재 '70대 이상'이 되었음

- 2014년 전국 유권자 1,211명, 그 외는 시기별 약 1,000명 전화조사(CATI).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33호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질문엔 '반성하고 있다'가 8%, '그렇지 않다'가 8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5%다.

이슬기(wise@yna.co.kr)